

“외국서 다쳐도 한국119로 전화하세요”

소방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이용실적 발표
 코로나 확산에 육상상담 49% ↓ ...해상상담 58% ↑
 의료상담>복약지도>응급처치 지도>영사콜 이관 順
 11월·금요일·오전 9시~오후6시에 서비스 이용 ↑



지난 한해 해외에 나간 국민이 다쳤을 때 긴급의료 상담을 해주는 119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이 2617명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소방청이 27일 발표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시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617명이 이용했다. 한 달 평균 193명, 하루 평균 7.2명 꼴로 이용한 셈이다.
 전년의 2277건에 비해 14.9%(340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객이 감소했음에도 서비스가 널리 알려지면서 해상 상담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소방청 측 분석이다.

해상 상담 건수는 2148건으로 전년(1358건)보다 58.2%(790건) 늘어났다. 반면 육상 상담은 919건에서 469건으로 49.0% 줄었다.
 이용 유형별로는 '의료 상담'이 1802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약을 먹도록 조치하는 '복약지도'는 299건(11.4%), '응급처치 지도'는 288건(11.0%), '영사콜 이관'은 44건(1.7%) 등이었다.
 상담 과목으로는 응급의학과 관련 문의가 1130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내과 456건(17.4%), 정형외과 273건(10.4%), 피부과 163건(6.2%), 외과 110건(4.2%), 안과 90건(3.4%) 등의 순이다.

환자 연령대 별로는 30대(602명·23.0%)가 가장 많고 20대(545명·20.8%), 40대(517명·19.8%), 50대(292명·11.2%), 60대(148명·5.7%), 10대 미만(59명·2.3%) 등의 순이었다.
 시기에 따른 상담 빈도는 11월(273건·10.4%), 금요일(417건·15.9%), 오전 9시~오후 6시(1477건·56.4%)에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비스 지역별로는 중국 51건(10.9%), 필리핀 38건(8.1%), 베트남 36건(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상 상담의 경우 외국인의 서비스 요청 비율이 50.5%로 내국인(49.5%)보다 더 많았다. 한국 국적의 선박이

나 한국인 선원이 탄 선박에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객·유학생·원양어선 선원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2년 부상소방본부가 원양어선 선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후 2018년 7월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어받아 모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소방청은 향후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선욱기자

목포해경, 한밤중 가슴통증 호소 섬마을 60대 여성 이송

한밤중 섬마을에서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던 60대 여성이 해경의 도움으로 긴급 이송됐다.
 2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4분께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서 주민 A(여·65)씨가 심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인근에 경비 중인 106정을 급파해 신의도 상대동리 선착장에서 A씨와 보호자를 탑승시키고 진도 쉬미항으로 이동,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해경의 도움으로 긴급 이송된 A씨는 현재 목포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해경은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헬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해 지난해 응급환자 341명을 이송한데 이어 올해 현재까지 11명을 긴급 이송했다.

주차 차량 6대 충돌 뒤 음주 측정 거부 중국인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주차 차량을 잇따라 충돌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국인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주차 차량 6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40여 분간 3차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차량털이 시도하던 남성, CCTV 관제요원에 덜미를

심야시간에 차량털이를 시도하던 남성이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청 CCTV통합관제센터 요원 A씨는 이날 오전 1시 41분께 남구 월평로를 모니터링 하던 중 주차된 차들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이에 수상한 감세를 느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털이를 시도하던 남성을 발견하고 절도 미수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남부서는 이날 남구청을 방문해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할 A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임현규 남부경찰서장은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은방서 금목걸이 훔친 10대 2명...목에 걸고 가격 묻고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도망가는 수범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8)씨, B(18)씨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2~23일 안양과 광명시에 소재한 금은방 2곳에서 13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은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와 한 명이 목걸이를 착용하면, 한 명이 가격을 물어봐 가게 주인이 가격을 확인하는 사이 매장에서 도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지난 26일 평택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금품은 유희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경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처벌 무거우나 형사미성년자여서 법원 판단 주목

지하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영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가 적용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공시설에서 노인을 폭행한 A(13)군과 B(13)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6일 오전 8시16분께 의정부경전철 내에서 7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닷새 뒤인 21일 오후 7시30분께 지하철 1호선 객차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이를 나무라는 노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일행이 당시 상황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자

영상 속 학생들을 추적해 A군과 B군을 찾아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상을 촬영한 일행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촬영 이후 유포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해 별도 처벌 계획은 없는 상태다.
 경찰이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노인학대죄를 적용키로 하면서 처벌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 소년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소년법 보호처분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 처벌은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최장 2년)로, 지난해 2019년 구리시에서 동급생을 흉



기로 찔러 살해한 초등학생이 10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70대 여성은 처벌의사를 밝힌 상태며, 다른 동영상에 나오는 고령의 남성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인학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직권 수사해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라면 갑질' 전 소방서장 강등→정직 3개월 감경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1계급 강등된 충북지역 모 전 소방서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27일 인사혁신처 소정심사위원회는 최근 도내 모 소방서 A 전 소방서장이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낮췄다.
 인사혁신처 소정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등보다 정직 3개월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A 전 서장은 지난해 7월13일 직원 회식 자리에 참석해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에게 건넸지만, 직원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징정을 접수하고 감찰을 벌인 뒤 충북소방본부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